

도-부안군, '수소경제 거점' 키운다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부안군

도민과의 대화서 지역 미래 현안 점검 친환경 에너지·문화 인프라 등 협력

불다 위도면 식도리 주민들은 해저 지포에 설치된 상수관로가 선박 등 외부 충격으로 잦은 파손을 겪으며 제한 급수와 단수에 시달려왔다. 도와 부안군은 88억원을 투입해 해저 상수관로(1.5km)를 매설하고 2027년까지 안정적 급수 체계를 구축한다. 244명의 식도리 주민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도 탄력 받는다. 부안읍 서외리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90억 원을 들여 문화원·전시관·수장고·국악 연습실·공연장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 건물을 짓는다. 올해 4월 착공을 목표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주민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안의 지역 복합문화·복지 공간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인 '바실복합 커뮤니티 하우스'가 지난 2024년 11월 착공에 들어갔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체육·복지·교육 기능을 한 건물에 담는다. 도는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준공을 차질 없이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산업거점 확대에도 나선다. 도는 새만금 농생명용 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만금청과 협력해 해당 구역 내 농산업 클러스터 부지 등

70만 평을 개발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도는 중앙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도민과의 대화를 마친 김관영 도지사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바다의 향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김 임가공(회임) 체험에 직접 참여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또 부안상설시장을 방문한 김관영 지사는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직접 장을 보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통시장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만호기자·부안=김석진기자

전북, '3특'에 걸맞은 권한·특례 보장받아야

민주 윤준병 의원, '전북자치도 대도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명시해 전복을 조세 전라전립의 국가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문화·관광·체육·교통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특례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례가 신설됐다. 또한 철도권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철도·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마련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단체들이 통합특별시 추진에 나서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5급·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위상과 경쟁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전북이 5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3특'의 지위를 제대로 활용에 실질적인 권한과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공식 출범하며 규제혁신과 지역지원 활용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특례와 권한이 선연적 수준에 머물러 농생명·의생명·첨단에너지·금융 등 핵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특례를 대폭 확대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청 시 우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및 영동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를 도입했다. 아울러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과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육성, 종자·육종 연구 및 시험포에 대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육성,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북형 농생명산업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쳤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규제 완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자치조직과 재정권 강화를 명시해 전북형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대폭 강화했다.

윤준병 의원은 "주변 광역단체들의 통합 논의 속에서 전북이 생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5급·3특 체제에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무너진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자치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정읍=김대환기자

국토부, 작년 12월 기준 주택 통계 공표 | 비수도권 인허가 2만712호 전년비 48.1% ↓



전북 출신인 김관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김 장관이 공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정활동에 나선 도의회 상임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현장의정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문화인문소방위원회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친 뒤, 한지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현장의정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농업복지환경위원회가 진안군 성수면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문화인문소방위원회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을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친 뒤, 한지리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이다.

준공후 미분양은 2만8,641호로 전월대비 1.8% 감소했다.

거래량 12월 주택 매매거래는 6만 2,893건으로 전월대비 2.4% 증가, 전월세 거래는 25만4,149건으로 22.2% 증가했다.

수도권 매매거래는 2만9,048건으로 전월대비 4.9% 증가, 비수도권은 3만 3,845건으로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4,871건으로 전월대비 10.8%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7만34천 전월대비 22.4% 증가, 비수도권은 8만4,115건으로 21.8% 증가했다. /권희성 기자

건실분야로 2025년 12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분량 준공 실적을 나열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인허가는 12월 수도권 8만2,077호로 전년동월 대비 31.3% 감소했으며 누적 실적은 22만2,704호로 전년동기(23만 4,083)대비 4.9%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월 인허가는 25,766호로 전년동월(1만8,441)대비 86.0% 감소하고 누적 실적은 4만 1,566호로 전년동기대비 19.2%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인허가는 2만7,12호로 전년동월(3만9,904)대비 48.1% 감소, 누적 실적은 15만7,130호로 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했다.

착공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착공은 4만3,44호로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했으며 누적 실적은 16만8,233호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서울 지역 12월 착공은 1만5,000호로 전년동월 대비 177.0% 증가하고 누적 실적은 3만2,119호로 전년동기대비

23.2% 증가했다.

비수도권 12월 착공은 2만3,865호로 전년동월대비 33.2% 감소하고 누적 실적은 11만5,862호로 전년동기대비 24.5% 급감했다.

분양은 12월 수도권 분양은 1만316호로 전년동월대비 8.1% 감소, 누적 실적은 11만8,956호로 전년동기대비 8.0% 감소했다.

서울 지역 12월 분양은 435호로 전년동월대비 56.5% 감소하고 누적 실적은 1만2,654호로 전년동기대비 53.3% 감소했다.

비수도권 12월 분양은 5,863호로 전년동월대비 27.0% 감소, 누적 실적은

7만9,417호로 전년동기대비 21.9% 감소한 수치다.

준공은 12월 수도권 준공은 9,049호로 전년동월대비 57.2% 감소, 누적 실적은 16만5,708호로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했다.

서울 지역 12월 준공은 3,196호로 전년동월대비 18.5% 감소, 12월 누적 실적은 5만4,653호로 전년동기대비 39.7% 증가했다.

비수도권 12월 준공은 1만5,355호로 전년동월대비 45.4% 감소, 누적 실적은 17만6,691호로 21.4%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말 미분양 주택은 6만 6,510호로 전월대비 3.3% 감소, 그중

농생명·새만금·국제행사 대응에 집중

도, 2~6일 주요 일정 공개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월 2~6일 도청 주요 일정과 핵심 추진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주는 농생명 산업과 새만금 스마트 산업 특별자치도 권한 강화 국제행사 대응 등 전북의 중장기 전략과 직결된 일정이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2일에는 전북 농생명 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농생명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는 바이오 산업 설명과 새만금 금융 중심으로 한 농생명 전략의 전환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에 햄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청년창업 연계 방안, 이재명 국민권선 정부 추진 중인 중부·기초소득 정책과의 연계 구상 등 농생명 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청사진이 설명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농어촌 활력 재단 발기인대회가 도립국악원에서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 이철규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월 2~6일 도청 주요 일정과 핵심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3일에는 민선 8기 동안 집중 추진 해 온 '전국형 스마트공장' 정책의 성과를 집중 홍보한다.

이어 4일에는 특별자치시도 입법 촉구 결의대회 및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장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며, 각 시·도에서는 부단체장이 참석한다.

같은 날에는 올림픽 추진과 관련한 추가 브리핑도 예정돼 있다. 이 대변인은 "올림픽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도의회 동의안 제출 이후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림픽 추진대상 주관으로 전반적인 추진 상

황과 향후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위촉된 새만금 위원회 민간위원들의 현장 방문 일정이 진행 된다.

5일에는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보전·복원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2월 6일부터는 밀라도 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일정이 진행된다. 김관영 지사는 5일 출국에 8일 귀국할 예정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전북의 위상과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전북혁신도시 KB금융 신한금융 종합허브 조성 '환영'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과 신한금융 종합허브가 조성되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한 서ან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해안과 파란바다에 담긴 역사적 선택"이라며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5급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 구조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 경제 동력을 확장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동안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자산운용 생태계 부족'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전북이 금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

전북을 공공의료 AI 혁신 국가 모델로

민주 안호영 의원, KAIST 총장과 AI공공의료캠퍼스 협력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주·진안·무주)이 KAIST 이광형 총장을 만나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구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AI 기반 공공의료의 발전 방향과 전북을 중심으로 한 지역 기반 의료 혁신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안호영 의원과 KAIST 간의 구체적인 협력 구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 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무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



이에 따라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을 AI 기반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려는 구상에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새만금, 국가전략 자산으로 격상해야"

정현을 익산시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정현을 익산시장(정읍)은 정부의 5급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전북이 소외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새만금을 전북의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5급 3특 전략에는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이 상태로는 전북이 또다시 국가 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실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일방적인 행거지 못하면 전북은 구조적 참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해법으로 새만금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중



국을 세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상하이 푸둥차럼, 새만금을 국가 차원의 전략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세-지방세 비율 40% 상향' 정책을 주목했다. 그는 "국가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이라며 "지방 재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지점이야말로 새만금 특별회계(특별계정)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을 총괄한 경험을 토대로, 과거에는 재원 부족과 타 지역 반발로 추진이 어려웠던 특별회계 신설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훈기자